

## K영화 없는 칸, K드라마 희미한 넷플릭스

### 광화문·부

### 어수웅

여론독자부장



제목 그대로다. 지난 주말 폐막한 78회 칸 영화제에 초대받은 한국 장편영화는 없었다. 넷플릭스엔 K드라마가 넘쳐나지 않느냐고? 맞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 지상파·종편 채널이 제작한 작품을 틀기만 하는 것. 넷플릭스 자체 기획·투자 작품은 급감했다.

4년 전의 이 칼럼에서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쓴 적이 있다. 이유는 ‘마법의 가성비’. 이전까지의 모든 시청 기록을 누르고 세계 정상에 올랐는데, 편당 제작비는 22억원 수준. 직전까지 1등이었던 ‘브리저튼’과 ‘기묘한 이야기’ 등은 회당 100억원에서 170억원 정도를 썼다. 할리우드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거둔 대성공이니, 플랫폼 입장에서 고마워도 이리 고마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시간은 흘렀고, 처지도 바뀌었다. ‘오징어게임’은 다음 달 마지막 시즌3를 방영한다. 편당 추정 제작비는 ‘브리저튼’ 두 배인 200억원. 주연배우 이정재의 출연료만 편당 100만달러라니, 시즌2·시즌3 총 13편을 합치면 우리 돈 140억원에 이르는 거금이다.

‘오징어게임’과 이정재의 대성공은 물론 축하할 일.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K콘텐츠의 수치 상승한 제작비다. 마

법의 가성비비는 옛말. 할리우드도 넷플릭스도, 그리고 이제 국내 투자사도 선뜻 돈을 내려 하지 않는다.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다.

영화·드라마는 예술이자 콘텐츠이면서 동시에 산업이다.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렵다면, 투자자들은 발길을 돌린다. 급감한 제작 편수가 현실을 선명하게 반영한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기간을 제외하면 2024년까지도 20여 년간 연 35~40편의 상업 영화가 개봉했다. 하지만 올해 예측은 그 절반도 못 미치는 15~20편. 절반 규모로 쪼그라든 것이다. ‘미션 임파서블’이나 ‘마블 시리즈’ 처

퇴보한 작품성·천장 높은 제작비 올해 칸엔 한국 영화 한 편 없고 넷플릭스도 신작 투자 ‘왕소금’ K콘텐츠, 각성하고 돌파구를

럼 대형스크린이 주는 쾌감이 없다면, 요즘 관객은 굳이 극장을 찾지 않는다.

영화에만 출연하던 스타도 다들 드라마로 옮겨갔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예외 없이 상승한 출연료와 제작비. 전술했듯 넷플릭스는 이제 예전만큼 한국을 고마워하지 않는다. 대신 눈 돌린 곳은 일본·인도·남미·동남아시아 등이다. 일반 시청자·관객에게 낯설지 모르나, 콘텐츠 강국 일본의 제작비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더 큰 걱정은 작품성의 퇴보다. 거액이 들어간 대형 상업 영화도, 실험성 짙은 예술영화도 웰메이드 작품을 찾기 어렵다. 칸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영화를 한 편도 부르지 않았지만, 일본 장편은 부문별로 6편을 초대했다. 한국 영화가 여전히 ‘봉박홍’ (봉준호·박찬욱·홍상수)에 의존하고 마동석의 한 방 액션에 취해 있을 때, 일본은 세대교체에 성공하면서 세계를 향해 AI 이후의 인간과 전체주의 이후의 국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근 개인적으로 충격받은 두 가지 경험이다.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구글 연례 개발자 대회에 등장한 AI 동영상. 유료 버전 구독료 월 300달러(약 45만원)면 누구나도 20세기폭스 영화·픽사 애니메이션 수준의 동영상을 한 달 80편까지 만들 수 있다. 아직은 1분 분량이지만 장편 분량 확장도 손쉬운 간이다. 또 하나는 서울 광화문 시내구브에서 열린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회고전. 고레에다 감독은 특유의 느릿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선 젊은 창작자들이 영화계보다 OTT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것 같다. 일본은 변화가 느린 덕분에 영화계가 OTT에 휩쓸리지 않았다. 극장을 지키려는 힘이 여전히 남아 있다.”

비싼 제작비 탓을 할 수도 있고, AI와 유튜브를 핑계 삼을 수도 있으며, 관객들의 변덕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누구는 기술로, 또 누군가는 독식으로, 또 누군가는 두 가지를 무무려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외부에 책임을 돌리거나 도와달라 부탁하기 전에, 무엇보다 한국의 배우·제작자·극장부터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김석철, 프랑코 만쿠조 공동 설계. 베네치아 비엔날레 한국관. 1995년 개관. 이탈리아 베네치아, 자르디니 디 카스텔로 소재.

을 파는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고, 굴곡진 벽면으로 수목을 피웠으며, 전면은 유리로 마감해 개방성을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관은 비좁은 평면에 유리벽 때문에 일반적인 전시를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하지만 대회 기획자와 작가들은 공간의 한계를 넘는 대안을 마련해 왔다. 30년 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관은 주어진 현실을 상상력으로 돌파하는 예술의 상징이 됐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83]

## 베네치아 비엔날레 한국관의 기적

올해는 베네치아 비엔날레 한국관 설립 30주년이다. 1895년 창설된 베네치아 비엔날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계 행사로, 자르디니 공원에서 국가관 별로 독립된 전시를 개최하는 구조다. 1995년 자르디니 내 26번째이자 작년까지 30년 동안 ‘마지막 국가관’이었던 한국관은 ‘하면 된다’ 정신이 이루어낸 혁신의 산물이다.

당시 한국은 이탈리아관 일부를 빌려 쓰는 형편이었다. 베네치아시(市)는 1988년 호주관을 끝으로 새로운 국가관 설립을 금지했고, 설명 하가를 한다고 해도 중국을 비롯한 20국이 줄을 서 있었으니, 한국관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었다.

전환점은 1993년. 통일 독일의 첫 국가관 대표 작가로서 백남준이 한스 하케와 함께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였다. 그는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 남북한이 하나의 공간에서 예술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문화계 인사들을 설득했고, 마침내 베네치아로부터 기적 같은 ‘한국관’ 허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조건은 혹독했다. 지면을 파거나 깎을 수 없고, 나무는 뿌리까지 보존해야 하며, 주변 경관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요철 시 곧바로 철거 가능한 임시 건물이어야 했다.

건축가 김석철(1943~2016)과 프랑코 만쿠조(Franco Mancuso·1937~)는 땅

## 社 説

## 대선서도 실종된 통일 담론, 그래도 통일은 온다

1945년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된 지 올해로 80년이다. 하지만 남북 갈등과 단절은 심화되고 통일 의식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구체적 통일 공약과 담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호혜적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통일 정책 공약은 없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비핵 평화 통일 여건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원칙론만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다르지 않다. 과거 대선 후보들이 중요한 통일 방안이나 구체적 대북 관계·통일 공약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통일 문제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2015년 순수 민간 차원의 통일 준비 기금인 통일과나눔 재단이 국민적 관심과 성원 속에 출범했다. 일반 국민과 기업·단체·각계 인사 등 170여 만명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고 720여 개 통일 준비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이 같은 노력에도 10년이 지나면서 통일 열기와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줄었

다. 재단 주최 청년 토론회에서 참석자 100명 중 59명은 ‘통일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했다. 10명 중 6명은 ‘통일에 관심이 없다’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통일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했다.

북한 김정일은 2023년 말 “남북은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라며 공식적으로 통일 거부 선언을 했다. 북한 주민들이 한 국을 동경하자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게 씩을 잘라버린 것이다. 그러자 놀랍게도 국내 친북 단체들이 동조하고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자진 해산했고, 통일 운동을 외쳤던 정치인이 돌연 “통일하지 말자”고 했다. 김정은 한마디에 ‘통일 지우기’로 급진화한 것이다.

이날 열린 재단 출범 10주년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통일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다. 이 말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나. 통일로 8000만 겨레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통일 한국은 통일 독일과 같은 지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려면 준비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부터 앞장서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방해해도 통일은 온다.

## 李 무죄 만들기 법안들도 철회하길

민주당은 26일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박병계·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니다.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 후보 의중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후보는 “내 입장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아니어도 향후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했지만 민기 어렵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대법원을 향한 보복성 법안을 쏟아냈다. 대법관 100명 증원법과 별개로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추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 카드를 꺼내더니,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조희대 특검법’도 발의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사법부를 겁박한 것이다.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정치 폭력이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대선 악재로 작용하자 결국 대법관 100명 증원 철회를 결정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파기환송 직후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부를 믿지만, 최후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민주 법치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고 인식이다. 조희대 특검과 청문회, 대법관 요건 완화 및 대법관 증원 법안이 쏟아진 것은 이 후보의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전부터 거론됐고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후보 판결에 대한 보복 방식은 안 된다. 그것도 한꺼번에 100명이라니 그 자체가 폭력적이다. 사법부 변경은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만 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선거법 조항도 고쳐 이 후보의 유죄 혐의를 원천적으로 없애려 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등록 및 당선 때는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 선고 재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국가의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폭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심각한 행위를 대선 국면에서 아예 드러내 놓고 진행하고 있다.

이 후보는 헌정 회복을 내세우고 있다. 헌정 수호 의지를 증명하고 싶다면 대법관 증원법뿐 아니라 이 후보 무죄 만들기 법안까지 모두 철회하길 바란다.

## 공약 감감이 대선, 판단 근거 역할 하는 TV 토론

27일 마지막 대선 TV 토론이 열린다. 앞선 두 차례 TV 토론은 경제와 사회를 주제로 했고, 이번에는 정치 분야 토론이 예정돼 있다. 정치 개혁, 개헌, 외교·안보 공약에 대한 각 후보들의 견해를 들어볼 사실상 유일한 기회다.

갑작스레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과 주요 사안에 대한 견해를 확인할 기회를 잘 갖지 못했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가 종료된 이후인 26일에도 공약집을 공개하지 못했다.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26일 저녁 공약집을 발간했고 민주당도 29~30일 사전 투표 전까지는 공약집을 내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읽어볼 새도 없이 투표장에 들어가야 할 판이다.

2017년 대선도 이번과 같이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졌지만 그래도 투표 열흘 전에는 양당의 공약집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각당이 서둘러 공약집을 냈다가 생길 수 있는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 사이 한국기자협회가 추진했던 대선 후보 TV 합동 토론회도 이재명 후보가 변경된 일정에 맞추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서울시가 진행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만 참석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TV 토론은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앞선 두 차례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추경, 관세 협상, 일자리, 에너지 정책, 연금 개혁 등에 대한 각자의 공약을 설명했다.

후보들이 서로의 욕설·갑질 의혹을 제기하거나 단일화, 부정 선거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 또한 각 후보의 여러 면모를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데도 지상파와 종편을 합한 1·2차 TV 토론의 총시청률은 역대 대선 처음으로 20% 미만을 기록했다. 더 많은 유권자가 3차 TV 토론을 시청하고 나름의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 국민 다수결이란 무엇? 대중 민주주의의 약점

newdaily.co.kr 뉴데일리

# 세상 내막 제대로 알고나 투표? 히틀러-차베스도 법의 이름으로 탄생!

아테네의 중우(衆愚)가 소크라테스 처형 | 독일-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 독재자 불러내 | 우리도 그 길임길에, 국민들 알아서 하시길

### ■ 한국 민주주의의 암울한 원부

오늘날 한국 정치의 비극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한 건 물론 좋았다.

그런데 그 국민 다수가 과연 세상 돌아가는 내막을 제대로 알고 주권자노릇을 할까? 이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의 암부(暗部)다.

고대 아테네도 민주주의를 했다. 직접 민주주의였으나, 한때 그 《직접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성인(聖人) 소크라테스를 죽였다. 청년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중대 범죄자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 했다.

### ■ 합법을 가정한 X수작들

오늘의 한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법안 철회) ▼대법원 판사를 100명으로 늘리겠다(법안철회) 30명으로 증원하겠다(법안 유지) ▼대법원이 판결한 걸 헌법재판소가



▲ 차베스, 히틀러, 푸틴도 《대중민주주의-투표-합법》이란 외피 아래 탄생했다. 대한민국도 그 길로 가는 급행 궤도를 탈 것인가? © 뉴데일리

다시 심리하게 하겠다. 하는 따위의 X수작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수 국민이 알까? 안다고? 알긴 뭘 알아. 알면 세상이 이렇게 되었겠나?

그래도 이 정도는 아직 약파다. 진짜 무시무시한 게 오고 있다. 요즘 하늘을 찌르는 합성이 똬지 아는가?

① 내란 세력 청산과 ② 사회 대개혁. 두 가지가 그것이다.

### ■ 내란 세력 청산 = 자유-보수-우파 타도-숙청-처단

《내란 세력 청산》? 탄핵에 반대한 《자유-보수-우파를 타도-숙청-처단하겠다는 것》이다. 《사회 대개혁》은 《체제를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합법적》으로. 《연성(軟性) 혁명》이다. 죽이되 부드럽게 죽이겠다는 것이다.

《내란 세력 청산》은 《차별법 제정-특검 설치-고소-고발-체포-구금-처벌 등으로 진행될 것》이다. 자들은 이미 《카톡 김연》도 선언했다. 《용정하겠다》란 말도 튀어나왔다. 어떤 대기업은 여차하면 해외로 도망가겠다.

### ■ 사회 대개혁 = 사회주의 혁명

《사회 대개혁》과 관련해선 엄청난 체제 변혁 계획들이 공공연히 선포되었다. 예컨대 이런 것들.

▼소수가 독점하는 부의 재분배, 경제 구조 개혁  
▼사회 공공성 강화 ▼무상 의료-무상 교육-무상 돌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동성애 합법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주 외교  
▼재벌-수출 중심 경제 구조 개혁

### ■ 흑마술에 혹할 것인가?

아주 천국을 바라시지 왜? 금 나와라. 똑딱하면 금 나온다 이거지? 사회주의 하겠다는 포고령. 이 마술에 혹할 테면 얼마든지 혹하라. 말린다고 말려지나. 꺾어봐야 알겠다면 꺾어보라.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주의의 허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세계 10위의 선진국을 만들어 낸 나라다. 그러나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안 하는 거다. 이보다 《차베스 독재》 같은 게 더 좋다면 얼마든지 가보라니까.

나중에 쓰레기통 뒤집 때 후회하지 않길! 국민, 알아서들 하시라.

###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5월 26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58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